

밥심! 쌀심! 대한민국의 힘!

특별기고

이현호
농협중앙회
광주본부장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쌀은 주식이자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재화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 공급망 위기를 겪어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유일하게 100%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쌀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우리의 식생활에서 쌀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그 중요성은 점차 잊혀져가고 있는 듯하다.

‘2023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56.4kg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했다. 1963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30년 전인 1993년 1인당 쌀 소비량 110.2kg과 비교하면 절반가량 줄었다.

우리나라의 쌀 소비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서구화된 식습관의 확산이다.

피자, 햄버거, 파스타 등 서양식 음식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전통적인 쌀 중심의 식단이 점차 밀려나고 있으며, 특히 바쁜 현대인들은 빠르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식품을 선호하게 됐다. 이러한 음식들은 주로 밀가루나 다른 곡물을 사용하여 만들어

지기 때문에 쌀의 소비가 감소되고 있으며, 글로벌화로 인해 다양한 외국 음식들의 높은 인기로 외식 문화가 발달하면서 쌀을 주식으로 하는 가정식의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아침식사 결식과 쌀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쌀 소비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2022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국민 58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침 식사 결식률이 34%로 집계됐다. 국민 3명 중 1명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이다.

개인의 생활방식이나 시간부족, 건강 및 다이어트 목적 등 아침 식사를 거르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아침밥을 먹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전체 쌀 소비가 줄어들게 된 것이다.

또한 경제적인 여유와 함께 현대인들이 건강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특히 체중 관리를 중시하는 현대인들 사이에서 쌀은 종종 단순한 탄수화물 공급원으로 인식되어 ‘다이어트의 적’처럼 여겨지는 잘못된 오해도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

이처럼 인구 구조나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쌀 소비 감소와 트렌드 변화의 원인은 다양하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쌀 소비량의 감소를 넘어서 농업 경제와 국민 건강, 문화적 정체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비 감소로 인해 쌀여가는 쌀 재고는 쌀값 하락의 결과로 나타나고, 그로 인해 농촌에서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쌀 농사를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무더위 속에서도 일렁이는 녹색물결을 보고 있노라면 흐뭇하긴 하지만, 본

격적인 벼 수확기를 앞둔 상황에서 현재 과잉 재고량을 소진하지 못할 경우 쌀값 하락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 고령화 및 일손부족으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농업·농촌에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물론 농협에서도 쌀 재고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협광주본부에서는 지난 6월부터 임직원들이 나서 ‘광주쌀 5만포파기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바른 식문화 형성을 위해 등교하는 청소년과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전사적인 쌀 소비확대 운동을 통해 쌀의 영양적 가치, 건강상의 이점 등을 홍보해 나가고 있다.

우리의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쌀을 재배하고, 쌀을 통해 건강과 생명을 지켜왔지만 쌀 소비의 급격한 감소로 생명산업이라고 불리는 쌀 산업과 농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쌀 소비는 단순히 우리의 식탁을 채우는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의 농업을 지키고, 우리의 전통을 이어가며,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행위이다.

보릿고개를 지내온 우리네 아버지들이 ‘전쟁나서 (쌀)밥 없으면 뭐 먹을래?’ 라는 우스갯소리에 ‘라면 먹으면 되지’ 라는 어린 아들의 철없는 대답처럼 웃픈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바람직한 방법은 우리의 식탁에 더 많은 쌀을 올리는 것이다.

쌀 소비는 건강과 전통을 지키고, 더불어 우리 농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다. 쌀을 사랑하고 쌀을 즐기는 쌀 소비 촉진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

社說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동상이몽 아닌가

무의미한 만남 모두 반성해야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을 놓고 첫 회동을 가진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무안군수의 3자간 만남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고 한다. 어느 한 쪽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일이다. 무안국제공항이 개항한 지 올해로 17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실에서 이를 해결해야 할 사회지도층의 분열과 무책임이 안타까운 일이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3개 단체장은 지난 29일 영암에서 회동을 갖고 민간·군공항 무안 통합이전에 대해 논의했다. 시·도와 무안군 관계자 등이 동석한 가운데 3시간 가까이 진행됐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고 한다. 특히 무안군은 1조 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한 광주시에 통합공항 이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공동 소음 측정은 물론이고 3차 회동 정례화 등의 제안도 거부했다. 어떤 경우에도 군 공항을 받을 수 없고,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 무안군의 입장이라고 한다.

광주 민간·군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 이유는 차고 넘친다. 광주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은 지역사회와 전체적인 국가 인프라의 효율을 높이는 국가적 사업이다. 무안국제공항에 국제 항공 노선이 늘어나 광주와 전남의 관광 인프라와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국 5위 규모의 항공과 이용객 수용시설을 갖추고 2025년 KTX가 정차하는 국내에서 유일한 국제공항을 이대로 놀리는 것도 국가적 손실이다. 공항과 관련해 매년 투입해야 하는 예산을 언제까지 국민의 혈세로 메울 수는 없는 일이다.

신뢰회복을 통한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어렵게 만들어진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무안군수의 만남이 성과 없이 끝난 것은 어느 한 쪽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의 책임이다. 광주·전남의 미래를 위해 무안공항을 이대로 뒤선 안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한시가 바쁜 지금,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이 모두 민간공항은 탐이 나지만 군공항을 피하고 싶다는 동상이몽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일이다.

폭염 취약한 전남, 대응 수위 더 강화해야

본격 폭염에 온열환자 급증

본격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전남지역에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폭염 3대 취약분야(취약계층·농업인·현장근로자)에 대한 폭염 대응 강도를 서둘러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759명으로 이 중 광주는 18명, 전남은 10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온열질환자 발생 수는 광주 20명, 전남 32명이었다. 특히 전남에서 지난해에 비해 온열질환자 3배 이상 급증한데는, 폭염에 노출된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아서다. 고온다습한 상황에서 고령의 농업종사자가 많고 취약계층과 현장근로자들의 온열증상이 잇따라서다.

전남도는 106명 온열질환자가 실내·외 작업장(48명), 논밭(19명), 기타(14명), 자택(13명), 길가(8명) 순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이날까지 구급대가 이송한 온열질환자는 4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명)보다 120% 늘어난 걸로 파악됐다. 온열질환자 분석 결과 논밭과 도로 등 야외 작업 중 발생한 환자가 22명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폭염의 강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소나기·태풍이 지난해보다 빈번히 발생했고 열대야 현상도 장마 기간 이어져 온 게 지역 내 온열질환자 발생이 폭증한 것으로 전남도는 분석했다. 특히 에어컨·선풍기를 통해 낮은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직종과 달리 농·어업분야 종사자들은 폭염에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온열환자 급증을 부추기고 있다. 온열질환은 치사율이 높은 위험한 질환이다. 면역력 등이 약한 고령층에겐 가장 취약하다. 이 때문에 폭염 특보가 내려질 시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고, 열 조절도 필요하다. 기후변화로 폭염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는 폭염에 대한 선제 대응을 나서고 있다. 하지만 기후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폭염 대응 수위가 높아야 한다는 반증이다. 행정당국의 폭염 대응 수위에 따라 도민의 생명도 좌우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jnilbo

Kakao Talk: 진일보
E-Mail: jebo@jnilbo.com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서석대



당일에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 출근 전까지 신선식품을 받아볼 수 있는 세상이 온지 오래다. 대형 유통업체가 ‘로켓·새벽·당일배송’ 등을 통해 속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생필품과 신선식품을 언제든 받아볼 수 있다. 저렴한 가격에 각종 할인까지 받는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호사가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의 편리한 퀵(quick) 서비스는 대도시에서나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인구감소가 심각한 농어촌은 사정이 다르다. 주거지 주변의 상권이 없어 일정 거리 이상을 이동해야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일명 ‘식료품 사막(food desert)’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식료품 사막은 고령화 비율이 높은 일본, 미국, 영국 등에서는 이미 사회 문제화됐다. 주민들이 신선 식품을 먹지 못하고 가공 식품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늘면서 비만 등 성인병과 영양 불균형 문제가 불거졌다. 또 주민들의 외출이 줄면서 사회적 고립을 겪는 경우도 생겼다. 일본에서는 이들을 ‘장보기 약자’ ‘쇼핑 난민’으로 정의한다. 일본의 장보기 약자는 800만명을 넘는다고 한다. 미국도 마트 등과 일정거리 이상 지역을 ‘식료품 사막’으로 정의하고 있다. 식료품 사막 거주민만 2350만명(2020년 기준)에 달한다고 한다. 이미 고령화가 진행된 선진국에서는 관련 정의를 만들어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도 빠르게 식료품 사막화가 진행 중이다. 통계청의

농림어업조사 결과 2020년 기준 전국 행정 리 3만7563곳 중 소매점이 한 곳도 없는 곳이 2만7609곳으로 73.5%에 달했다. 이중 2224개(5.9%) 마을에는 대중교통도 없다.

식료품 사막화를 막기 위해 ‘만물트럭’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주민이 생활필수품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를 시범운영한다.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는 각종 식료품과 생필품을 싣고 농촌 마을을 돌며 판매하는 일명 ‘만물트럭’을 의미한다.

일부 시행중인 만물트럭이 닿는 마을 곳곳에선 ‘오픈런’(문을 열기 전부터 줄을 서는 행위)이 이어질 정도로 인기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먼 거리를 오가며 장을 보는 수고를 덜어주는 만물트럭은 고립된 마을에 ‘귀한 손님’일 것이다.

‘식료품 사막’은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 과밀화를 만든 인간의 과오나 다름없다. 전화 한통, 클릭 한번이면 식료품을 당일배송해주는 21세기에 식료품을 살 수 없어 생존에 위협을 받는 국민이 존재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식료품 가게조차 없어 고통 받는 농촌 주민들에겐 만물트럭은 ‘오아시스’나 다름없다. 정부 차원에서 만물트럭을 늘려 ‘식료품 사막’을 막아야 할 것이다. 소외된 시골마을없이 전국 방방곡곡 누비는 ‘만물트럭’의 활약을 기대한다.

김성수 논설위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 보도 실천 지역 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